

추석 앞둔 벌초작업 ‘벌쏘임 주의보’

전남지역 지난 주말 벌쏘임 사고 44건...이달만 2명 사망 소방관계자 “성묘 벌집 발견 시 신속하게 현장 벗어나야”

추석연휴를 앞두고 벌초작업을 하던 70대 여성이 벌쏘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지난 주말 벌쏘임 사고가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진도보건소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시45분께 진도군 조도면에서 벌에 쏘인 A(77·여) 씨등 주민 2명이 조도보건지소를 찾아왔다.

당시 신체 수십군데를 벌에 쏘인 A씨는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고, A씨를 차에 태워 데

려운 조카도 동일 증상으로 혼절에 가까운 상태였다.

보건소는 소방당국과 연계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조카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도 벌에 쏘여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작업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주말(27-28일) 전남지역에서는 총 44건의 벌쏘임 사고가 잇따랐다.

앞서 28일 오전 11시14분께엔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의 한 야산에서 B(50대) 씨가 후두부와 왼쪽 손가락을 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화순소방서는 B씨가 산 속에서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여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고 현장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한 오전 10시54분께엔 영광군 범성면 상당리에서 주민 1명이 벌초 중 벌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는 등 17건의 벌쏘임 사고가 신고됐다.

지난 27일에는 27건의 벌쏘임 사고 환자 긴급 이송이 이뤄졌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완도군의 한 야산에서 주민 1명이 벌초 중 벌쏘임 사고

로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벌집 제거와 벌쏘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향수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선불리 제거하지 말고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공격받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복기자

경찰 치안센터 30%는 ‘빈집센터’

이형석 “효율적 관리 위해 전수조사해야”

밀착형 대민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이 빈집처럼 방치돼 있지만, 경찰청은 당초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안센터 운영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9일 열린 2021년 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검토 결과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에 상주 인력이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실상 빈집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만들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 전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경찰청 치안센

터는 총 979곳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33%인 326개소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주 인력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2021년 회계연도에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치안센터 운영 예산으로 23억여원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로는 28억여원을 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쓴 것이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치안센터가 방치되고 있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청소차 연료 빼돌려 개인 승용차에 주유

광산구 시설공단, 환경미화원 2명 고소

청소차에 넣을 기름을 빼돌려 개인 승용차에 넣은 환경미화원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환경미화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A씨 등이 법인가대로 결제한 연료를 개인차에 주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 등은 주유소에서 휴대용 기름통에 받아 구매한 연료를 별도 보관하며 사적으로 썼다.

공단은 이들이 빼돌린 연료가 각각 수

백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 중이다.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를 거쳐 여죄나 공범이 드러나면 함께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의 단체 행동, 광산구의 특검감사 등 내부 잡음이 시달리는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청소차 운전원들의 횡령 내용을 확인했다.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은 성과급 지급 등 처우 개선, 강제 음주 측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는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유로 종합감사 3개월 만에 특검감사를 벌이고 있다.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단은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2015년 설립됐다. /이옥근기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석 연휴를 10여일 앞둔 29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관내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자문위원들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대상은 명절 연휴기간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영화상영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애리기자

광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테러·범죄 방지...9월1일부터 30일간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북구 총민사 앞 전신주 불...일대 잠시 정전

광주 북구 화암동 총민사 앞 전신주에서 불이 나 주변 일대가 잠시 정전됐다.

29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4분께 북구 화암동 총민사 입구 전신주와 선로에서 불이 났다.

불이 인근 나무로 번졌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8분 만에 완진됐다.

화재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신주와 선로가 타 북구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변 마을과 군부대가 정전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고압 선로에 단락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입점 거부 세입자...대법 “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